

국힘 “정부, 세금·규제로 국민 들들 볶아” 저격

국토부, 토허제 실거주 유예 확대
野 “부동산 시장 작동 원리 무시”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주택 매입 시 4개월내 입주, 2년간 실거주 규정 등으로 전세 세입자가 거주 중인 주택거래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출구 모퉁이에 나섰다. 주택과 부양이 큰 다주택자 매출까지 유예하는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인바 전방에 힘이 실리는 기류여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매수자의 입주를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김이탁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실거주 유예가 일부 다주택자 매도 물건에만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가 있었다”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실거주 의무 유예에 대응을, 당초 ‘비거주’로 확대하고 있는 주택 전세’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말까지 토지거래허가권을 신청하는 경우에 한해 세입자가 있는 주택 전세’ 실거주 유예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2일 기준 임대 중인 주택은 임대차계약의 최종 종료 시점까지는 실거주 유예가 인정된다. 다만 유예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연임하는 12월 31일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고 4개월내 주택 취득 등기를 마쳐야 한다.

주택매입허가규제도 일부 연동된다. 정부는 토지거래허가 대상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전입신고 의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전세가 긴 주택 특성상 실제 대출 가능 금액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저효율 사업 줄여야”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내내 정부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세상이 많이 변했고,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에 소위 저효율 사업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예산 총액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효율성을 높이는 총액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민원과 정치적 지역, 지향 등으로 인해 기존에 있는 예산을 없애거나 어렵다는 것을 안다면서 “효율이 90%인 사업을 정리하고 그 돈으로 효율 100% 사업을 하면 예산이 10% 늘어나는 것과 똑같다. 평가가 쉽지 않다면 과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능 금액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송연석 원내대표는 12일 “신속 아파트 공급이라는 부동산 시장의 작동 원리를 무시하는 부동산 채 세금과 규제로 국민들 들들 볶고 있는 형국”이라며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매달 잠금 현상 반복되자 다주택진 정부는 비거주 1주택자의 토지거래 허가 예외까지 꺼내 들었다”고 맹비난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다주택자 임대세 증과 강화 정책으로) 집 없는 사람은 전·월세 폭탄, 집 있는 사람은 세금 폭탄, 실수요자는 규제 폭탄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특히 “최소한 선호 매물들 시장에 즉시 내놓을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비현실적”이라며 “(부동산) 토론회를 가리키고 공약 설명도 못하는 정일오 민주당 후보가 서울 시장이 된다면 부동산 시장의 파국은 불 보듯 뻔하다”고 일갈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위한 기본권 실현’을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 말씀드렸다”라며 “서울 수도권에 ‘반값 전세’를 확대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부동산 안정의 핵심인 공급 확대”라며 “조형민 지우 임대제안 완화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을 촉진하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해 실질적 공급 확대를 국민에게 선택받겠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이에 앞서 더불어민주당 정영오 서울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관련 정책을 놓고 기 싸움을 벌였다. 다만 당초 여야 후보 토론을 목적으로 추진됐던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는 정 후보의 불참으로 전날 오 후보 단독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오세훈 후보는 토론회에서 “공급이 전월세난의 근본적 해법”이라며 “2031년까지 31만 가구 공급을 목표로 재개발·재건축을 활성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대출 제한을 푸는 등 주택 공급난 해결에 닦고 그 답안이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 후보의 발라깽공약에

대해선 “별이저므로 철회해야 한다”면서 “발라깽 많아지면 재개발 동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제작한 지방세 안내문을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인 9만5898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14.3%, 베트남 10.6%, 미얀마 5.9%, 우즈베키스탄 4.3%, 몽골 3.4%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저는 시장이 된다면 데이터에 기반해 정책화가 쟁기고 또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產團 입주기업 태양광 설비 설치비 지원

경기도, 18일까지 신청 접수

경기도가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비를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는 ‘2026년 산업단지 RE100 전환 시범사업’ 참여기업 10개 내외를 오는 18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지방·주최장 등 유류공간을 활용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려는 도내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상으로 설비 용량에 따라 설치비 일부를 차등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300kW 이상 500kW 미만 설비 설치시 500만원 ~ 500kW 이상 750kW 미만 설비 설치시 750만원 ~ 750kW 이상 1000kW 미만 설비 설치시 100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자가설비를 설비 뿐만 아니라 임대용 설비나 시공사 등을 통한 구축형(리스닝) 방식까지 폭넓게 인정해 각 기업의 재무 여건에 맞춰 자유롭게 도입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산업단지내 유류공간에 태양광 설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경우 참여 기업들은 당장 매출 청구되는 전기 요금을 절감하거나 추가적인 임대 수익을 창출하는 경제적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윤터 기업의 필수 생존 전략으로 자리 잡은 친환경 경영과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목표 달성에도 직접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통해 지난 4월 모집 공고를 시행했으며,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공고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 관계자는 “고유가로 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ESG 경영과 RE100 이행에 준비하는 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재생에너지 공급 기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수협·재능수 기자 cjs7749@siminilbo.co.kr

외국인 지방세 납부 편의 향상

인천시, 6개 언어 안내문 배포

인천시는 외국인 주민의 지방세 납부 편의를 위해 총 6개 언어로 제작한 지방세 안내문을 배포했다. 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외국인인 9만5898명으로 주요 국적은 중국 14.3%, 베트남 10.6%, 미얀마 5.9%, 우즈베키스탄 4.3%, 몽골 3.4%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납자 역시 다양한 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언어 이해를 위한 맞춤형 안내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엔 제작된 안내문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미얀마어, 우즈베키어 등 총 6개 언어로 구성됐다.

한편 시는 비자 연장 전 지방세 체납 확인제도도 운영해 외국인 체납자의 비자 연장을 제한하고 외국, 외국인 근로자 전용보험(출국금기보험·귀국비용보환)과 휴면보험금 압류 등 내국인과 동일한 수준의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문선지 기자 mcs@siminilbo.co.kr

장동혁 “이재명 피해자면 조주빈·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 비판

張, ‘특검법 율로’ 추미애 직격
“보수의 어머니 책 돌아와서 영교에 밀리기 싫었나”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억울한 피해자의 명예 회복”이라고 “조각 기사 특검”을 옹호할 때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2일 “보수의 어머니 추미애가 들어왔다”며 “세입자 서영교

에게 밀리기 싫었나”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이 억울한 피해자면 대한민국에 감옥 갈 사람이 누가 있다. N번방 조주빈도, 마약왕 박왕열도 억울하다 할 판”이라고 날을 세우면서 이같이 비판했다.

특히 “홍사리도 추미애가 경기도지사 되면 좋은 짓 개 딸들이다”라 치자하고, 도민에게 쓸 돈을 죄판단체에 갖다 바칠 것”이라며 “용인 삼성 반도체 세만급 보내자

고 앞장설지도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파괴 여왕’ 추미애 vs 경기도 살인 ‘반도체 신화’ 알함자’라고 여야 후보를 비교하면서 “(경기도지사 선거)결론은 정해져 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앞서 추 후보는 전날 MBC 라디오에서 야당의 책임론 제기에서 “절저한 수사로 조작기소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생각해져, 칼을 겨

꾸로 대고 책임론을 제기한다는 지적이 남음이 되지 않는다”라며 “형사소송법에 고공 기각 판결을 하도록, 또는 그 정 단계에서 공소기각을 결정하게 돼 있는데도 잘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통해 조작 사실체가 명명백백히 밝혀진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시키는 게 답안이다”고 강조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서울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절차 24→17개월 단축… 비강남권 가점 부여

내달 10일 제도 개선 설명회

2023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운영 중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이 서울의 경관을 바꾸는 것을 넘어 도시경관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도록 대대적인 제도 손질에 나선다. 절차는 간소화해 실행력을 높이고 다양한 지역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은 낮추고, 건축물의 디자인적 가치를 보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사후 관리도 강화한다.

시가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은 민간의 창의 디자인과 시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공성 있는 공간을 제안할 경우 높이·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총 19곳이 선정돼 창의·혁신적 건축물을 넘어 서울경관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1호 선정대상은 ‘성수동 마아트 부지’로 원형과

사각형이 조화를 이루는 독창적 외관으로 2028년 준공 후 크레프트 신사옥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관철동 대일화학 사옥, 대치동 빔빌 사옥 등은 혁신적 디자인의 입주시설로 지역경제 활성화의 선순환을 이룰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독창적인 모체로 24개월 이상 소요된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불계,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지가와 부지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적용한다.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 19곳 중 9곳(47.4%)이 강남·서초구리는 점수를 감안해 규제완화 177호를 동일하게 적용, 비강남권 지역 중도 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비강남권 지역은 소규모 부지의 경우 지중부 발생 등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가 핵심이다. 첫째, 민간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복잡한 행정 절차에 가로막혀 통력을 잃지 않도록 사업 추진 시 ‘패스트트랙’을 제공한다. 기존 ‘디자인 혁신사업 대상지 선정’부터 ‘건축허가’에 이르는 7단계 절차를 4단계로 파악해 통합해 평균 24개월 이상 소요된 기간을 약 17개월로 단축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둘째,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사업 혜택이 특정 지역에 몰리지 않도록 지가와 부지 규모를 고려한 맞춤형 지원책을 적용한다. 비강남권 지역에 가점을 부여해 참여를 유인하고 이를 통해 균형발전을 실현하는 방식이다.

현재 선정된 대상지 19곳 중 9곳(47.4%)이 강남·서초구리는 점수를 감안해 규제완화 177호를 동일하게 적용, 비강남권 지역 중도 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 가점을 부여한다. 또 비강남권 지역은 소규모 부지의 경우 지중부 발생 등에 제약이 있음에 따라

5000㎡ 미만의 대상지에 대해서도 가점을 준다. 또한 업무·문화·숙박 등 다양한 도시기능을 수용하는 ‘도시집합형 재개발사업’도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시켜 창의적인 디자인 도입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셋째, 디자인 일관성 유지를 위해 대상지 선정 시 ‘혁신도시 조성 계획’을 결정·명시하고 사업 전체 과정에서 변경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고시 후 후속 단계에도 이를 반영한다.

또한 향후 핵심 디자인 요소를 반영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디자인 일관성을 최대한 유지한다. 한편 서울시는 6월10일 오후 2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지하 3층 비움홀)에서 사업 관계자와 지지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제도개선 사항 전반을 안내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 예정이다. 이대유 기자 nice@siminilbo.co.kr

금사면

2026
광의속으로!
금사참외축제

여주시

아삭함에 물든다,
금사참외에 빠지다!

제20회 금사참외축제

2026.05.22.(금) ~ 05.24.(일)
여주시금사면금사리근공원

- 참외·농특산물 판매와 전통 문화 공연
- 참외 생육과 가공식품 전시
- 참외따기와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 노래자랑 및 연예인 초청 공연

내대추

미스김

유지경

트윈걸스

이무송

주최·주관 금사참외축제추진위원회 | 후원 여주시·금사농협·금사면주민자치위원회·금사면농민회